

대전·충청지역 청년실업과 대안

장 주 영 (대전청년 유니온 위원장)

대전충청지역 특히 대전지역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 하고, 지역에 정착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하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 여기 저기서 팔을 걷어붙이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표면적인 실업률만을 낮출 뿐, 실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잠시라도 일을 했던 사람들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직활동 대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람 역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I. 취업용 스펙 만들기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스펙(specification, 보통 장비나 기계의 성능 및 구성을 나타내는 말이나, 한국에서는 사람의 학벌, 어학 점수, 자격증, 어학연수 여부, 인턴쉽 여부 등을 가리킨다.)’이 필요하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스펙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2011년 상반기에는 토익 688점, 학점 3.4점(만점 4.5점), 자격증 평균 1.8개였던 평균 스펙이 2012년 상반기에는 토익 707점, 학점 3.5점(만점 4.5점), 자격증 평균 2개로 늘어났다. 스펙 인플레이션은 비단 좁아진 취업문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부의 대물림

1) 출처: 사람인 2012. 08. 08. 보도자료 「상반기 합격자 스펙, 전년 대비 상승」

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청년유니온이 올해 4월 말부터 5월 20일까지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스펙인 학력/어학/자격증/어학연수 등의 스펙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을 조사한 '이력서 가격'에 따르면²⁾ 평균 이력서 가격이 4,269만원이었다. 이력서 조사에 응한 사람 중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평균 임금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32개월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의 경우 평균 임금이 200만 7천원이므로 꼬박 26개월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의 경우 평균 임금이 144만원으로 꼬박 36개월을 모아야만 하는 돈이다.

취업에 성공해도 감당하기 힘든 스펙 만들기 비용인데, 과연 청년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펙을 쌓을만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결국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빚을 내서 충당하는 방법 뿐이다. 굳이 다른 스펙 외에 학점만 따져보더라도,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을 쪼개어 과제를 하고 학과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 학과 공부에 충분히 시간을 쏟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높은 학점을 얻을 거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나마 노동환경이 나은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대졸 청년들의 사정이 이렇진데, 스펙을 쌓을 수도 없는 고졸/중퇴 청년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사정에 몰려있을 것이다.

II. 쌓은 스펙이 쓸모없는 일자리

이렇게 취업에 필요한 스펙과 비용은 높아져만 가는데, 정작 취업을 한 이후에는 스펙을 써볼 곳이 거의 없다. 모든 기업이 해외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니 높은 토익 점수가 쓸모없고, 모든 업무에 자격증이 필요하지도 않다. 한편, 노동부의 직업능력지식포털인 HRD-Net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대졸자들의 높은 스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

2) 출처: 청년유니온 2012. 05. 29. 보도자료 「청년층, 평균스펙 비용 4269만원!」

게 만드는 저임금 단순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이 대부분이다. 스펙을 쌓는데 들인 노력과 비용 모두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단기간 창업을 통해 수치상의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는 청년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 유인할 뿐만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자영업자의 길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올인할 뿐이다. 눈에 보이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보다, 청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토대를 다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포함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비중이 겨우 12% 남짓하다는 사실³⁾을 볼 때, 대부분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매우 열악한 일자리들이다. 최근 10년 동안 5대 재벌집단의 자산규모가 230조원에서 620조원으로 늘어난 것⁴⁾을 볼 때, 열악한 청년 노동 현실은 재벌에 이윤이 모두 몰리고, 고용을 축소해가며 이윤을 증가시키는 재벌 위주 경제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현재처럼 대부분 중소기업이 재벌 하청업체로서 존재하고, 전체 이윤의 40%를 재벌이 모두 가져가는 경제구조에서는 자생력을 갖기 힘들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다고 질책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그러한 질책을 받을 대상은 오히려 재벌, 그리고 재벌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주변 청년들 중 임금체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며, 두 세 사람이 해야 할 몫을 혼자 하기에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취업 당시에 약속했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들을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용 공고에 기재해두었던 복리후생,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내용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일단 뽑아보고 격무 및 노동환경에 적

3) 매일노동뉴스 2012. 02. 16.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재벌규제법 만들자」

4) 매일노동뉴스 2012. 02. 16.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재벌규제법 만들자」

응하지 못 하고 그만두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뽑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숙련도,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일종의 부품처럼 여기는 셈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라 해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도 않고, 한 사람이 견뎌내기 힘든 노동강도를 강요하면서, 근성이 부족하다,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얘기하는 건 대체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 이번 달 구미의 한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망한 노동자 중 대부분이 20, 30대 청년 노동자였다. 지난 달 정읍의 LS그룹 계열사에서 일어난 용광로 관리부실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도 20대 청년 노동자였다. 2010년 9월에 용광로에 빠져 목숨을 잃은 노동자 역시 20대 청년 노동자였다.

비단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 중 배달노동자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종사하게 되는 업종에는 안전망이 거의 없다. 실업을 넘어서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9월 19일 대전고용포럼에서 발표된 내용 중 대전지역 청년층 구직단념자의 구직단념 이유⁵⁾를 살펴보면, 46%가 ‘희망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이라 답하였다. 지난 6월 대전청년유니온이 발표한 대전지역 청년노동실태조사 결과에서 대다수 청년들이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받거나, 법정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열악한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서비스 업종 아르바이트를 떠나 정식으로 취업을 하려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용되며, 노동강도 등 여러 면에서 그보다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Ⅲ. 진정한 실업 대책 :

5) 대전고용포럼 2012. 09. 19., 대전대학교 최효철 교수 「대전지역의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청년고용 촉진 방안」

노동권 보장과 재벌 규제, 공공영역 확충을 통한 재분배

실업에 대한 대책은 창업을 지원하거나,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다. 결국,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수 밖에 없다. 기존에 있는 사업장의 안전설비 등을 확충하고, 최소한의 인원이 아닌 충분한 인원이 일하며 노동강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재벌에 집중되어 있는 수익 구조를 바꾸는 일이 필연적이다. 지역의 사업주들과 전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이 노동기본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체계 역시 필요하다.

일반 기업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확충 역시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사회복지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공공서비스체계 확충과 교사/경찰/소방 공무원 확충,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공공교육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안전한 삶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야만 실업 역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용 관계를 맺기 어려운 문화예술/체육 분야 노동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실업문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스펙을 쌓게 만드는 기업의 관행과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야 한다. 또한, 경제력의 격차와 상관없이 누구든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산업 구조의 개선과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교육 체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결국 사회의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이다.